

코로나19 위기대응 : EU 회원국의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I

유로파운드 (Eurofound)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7~8월호 이슈별 심층분석에서는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 발행한 *COVID-19: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Working Life*의 제4장, “Income Support for Self-employed Workers”의 내용을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도입,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개발, 수급자격요건을, 다음 호에서는 지원금 수준 및 지급기간, 지원금 수급 및 예산 집행현황, 소득보장제도의 과급효과,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 도입

고용보호제도는 임금노동자의 단기 및 중기적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되어 개선 및 확대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및 기타 자영업자 집단은 대부분 임금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호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은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OECD, 2020). 자영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장치가 부재한 것은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¹⁾ 강력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단체교섭력이 부족하며(Eurofound, 2020a), 소위 말하

* Eurofound(2021), *COVID-19: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Working Life*, COVID-19 Series,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p.45~56, 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field_ef_document/ef20050en.pdf

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가 부재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수년간 개별 회원국 및 EU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EU 이사회는 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접근에 관한 권고와 같이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9).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의 높은 빈곤율에 대한 우려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던 상황이었다(Eurofound, 2017a; Horemans and Marx, 2017; Spasova et al., 2017).

이전의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정형 노동자는 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로파운드의 「코로나19 시기의 생활과 일(Living, working and COVID-19)」 온라인 조사 결과, 코로나19 기간의 실직 확률은 1인 자영업자(13%)가 임금노동자(8%)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3%)보다 훨씬 높았다. 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상당수(5.9%)는 이 시기에 1인 자영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임금노동자보다 훨씬 더 높았다(약 50:25)(Eurofound, 2020b).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절반 이상에서 노동시간이 평균 16시간 감소했고 그중 60%는 이로 인해 소득도 줄었다고 답변했다(Kritikos et al., 2020).

자영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EU 회원국의 자영업 현황과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스 1 참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설, 숙박, 도소매, 예술/휴양, 운송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 산업 중 일부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자영업자는 소득보장제도와, 팬데믹으로 강제 휴업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인 운영비용 지원, 신용카드 대금 납부유예,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납부유예, 저금리 대출 지원 등²⁾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제도와 기타 유사한 지원책을 활

1) 제도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거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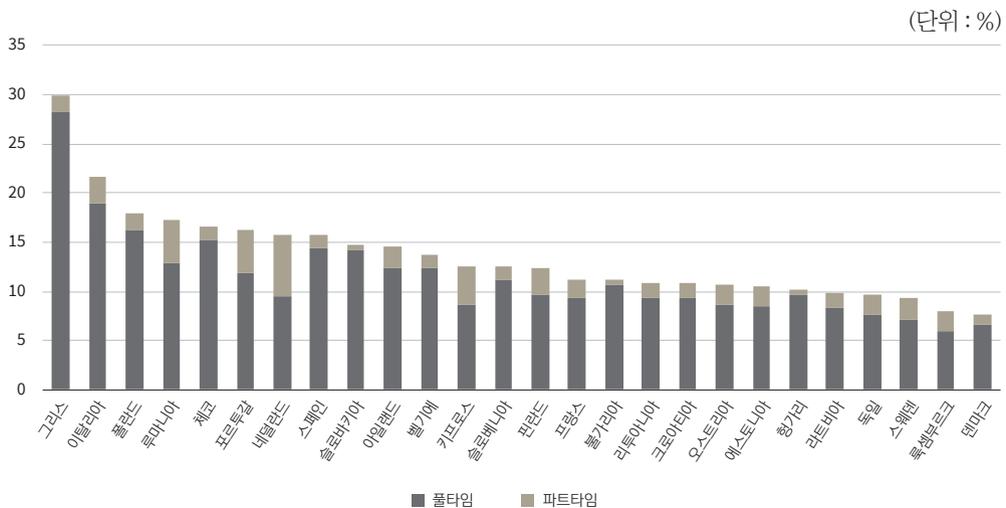
2) 편집자 주: 자세한 내용은 Eurofound(2021), *COVID-19: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Working Life*, COVID-19 Seri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p.17~20. 참조.

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사업체 도산 증가를 막기 위해 일련의 기업 지원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1인 자영업자와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대책보다 소득보장지원금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은 자본화 수준이 낮아 단기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Becker, 2020).

[박스 1] EU의 자영업 현황

2019년 현재, EU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14%로, 10%는 1인 자영업자이고 나머지 약 4%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회원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그리스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고,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포르투갈이 순서대로 그 뒤를 따랐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독일은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그림 1 참조).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풀타임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2.5%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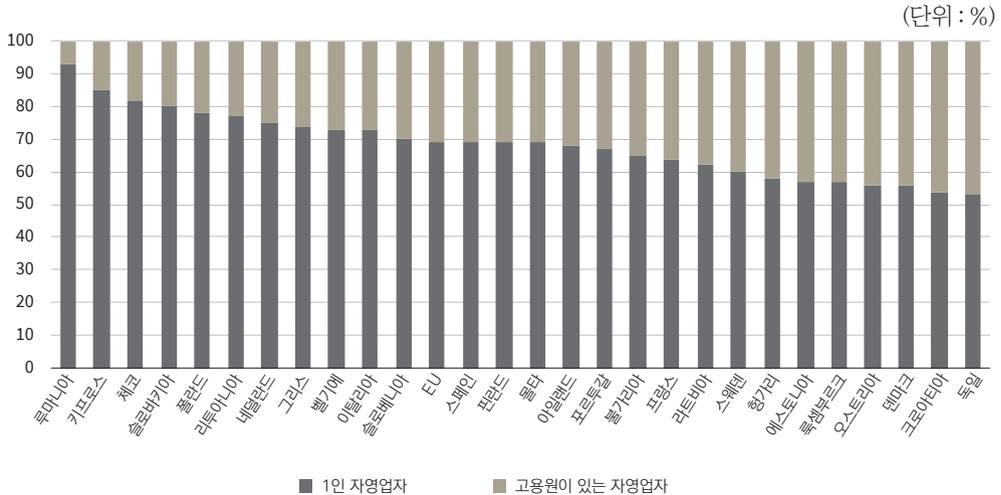
[그림 1] EU 27개국의 풀타임, 파트타임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 비율(2018년)



비고: 몰타는 자료가 없어서 제외됨.

자료: EU-LFS.

[그림 2] EU 27개국의 전체 자영업 종사자 중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2018년)



자료: EU-LFS.

덜란드의 경우 파트타임 자영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2015년 유럽노동조건조사(EWCS) 데이터에 잠재계층분석기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Eurofound, 2017b), 자영업자 집단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두 집단은 전반적으로 유리한 노동조건을 갖춘 “안정적인 자영업자”와 “사용자”이고, 다른 두 집단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취약 자영업자”와 “종속 자영업자”이며, 마지막 집단은 “소상공인 및 소농”으로 다양한 자영업자가 혼재된 집단이다. 취약 자영업자 집단은 하나 또는 제한된 수의 고객에 의존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선호보다는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집단은 전체 자영업자와 비교해 볼 때 여성과 고령자의 비중이 높다. 종속 자영업자는 임금 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집단으로,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주 5일을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주급 또는 월급으로 보수를 받으며, 자영업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나 자율권이 제한적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남성과 청년층의 비중이 높다.

EU 내에서 취약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7%, 종속 자영업자는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집단을 합치면 약 8백만 명에 이른다.

■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개발

EU 회원국의 3/4 이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정책에 따라 휴업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Eurofound, 2020a; Fana et al., 20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형 노동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에 관한 정책 논의는 상당 기간 EU 및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자영업자는 창업에 따르는 위험을 알고도 이를 선택하였고, 강제 가입 의무는 없으나 (제도가 있는 경우) 공적 및 민간 사회보장제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하게 되자, 이들이 생계, 고용, 전반적 구매력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었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의 사례를 제외하고(박스 2 참조),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팬데믹의 충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제도 운영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스 2] 기존 자영업자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한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의 사례

벨기에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브릿지 권리(bridging right) 제도는 기업의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졌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변경된 코로나 브릿지 권리(corona bridging right) 제도는 수급자격요건이 영업 중단기간 7일로 완화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임금노동자들이 한시적 실업급여제도³⁾를 통해 지원받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핀란드는 기존의 한시적 실업급여제도를 자영업자에게 임시로 확대 적용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파트타임 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타임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하거나 월소득이 1,089유로(약 147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실업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수익이 10% 넘게 감소한 경우 자영업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신설된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기존 조항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신설 조항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거나 소득감소율이 이전 6개월 평균소득 대비 75% 이상인 자영업자의 지원금 수급은 더 용이해졌다. 계절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연간소득 변동을 감안하는 특별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많은 EU 회원국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임금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이 확대되고 기업단체들이 정부의 봉쇄조치로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업자들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한 후에야 도입되었다. 덴마크, 독일, 그리스에서는 유지비용 충당

3) 편집자 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휴직하게 된 노동자에게 월 급여의 70%(최대 월 2,754.76유로)의 실업수당과 일 5.63유로의 보충수당을 지급함(<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mcc/erm/support-instrument/temporary-unemployment-support> (검색일: 2021.6.22)).

을 위한 1회성 지원금, 저금리 대출, 납세 유예 등의 조치가 먼저 시행되고 난 수주 후에야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다수의 취약 자영업자들은 한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축에 의존하거나, 기타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득을 유지하거나, 사적 지출을 줄여 사업을 유지해야 했다(Block et al., 2021).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이러한 소득보장 조치들이 얼마나 빠르게 도입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상당수의 제도가 최초 시행된 지 몇 주 또는 몇 개월 후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핀란드에서는 제도 변경이 주로 기간 연장에 한정되었지만,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에서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지원금 수준 확대)을 완화하였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완화되자,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은 수급대상을 봉쇄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위주로 제한함으로써 수급자격요건을 다시 강화하였다.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한 소득보장대책은 시행기간에 있어서도 회원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체코, 그리스, 라트비아, 루마니아에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중 몇 개월만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기간이 2020년 말 이후로 연장되었다. 여러 회원국에서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제도와 임금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처음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추후 기간이 연장되는 식으로 운영된 것은 마찬가지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적 기간연장이 더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재고 관리, 직원 고용, 투자 결정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제도의 시행기간과 더불어, 수급요건 또한 팬데믹이 자영업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자영업자 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례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러한 대책의 1차 목표이기는 하지만, 잠재적인 사중손실과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게 될 리스크도 고려하여 수급요건이 마련되었다. 정책설계 과정에서, 수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과 이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충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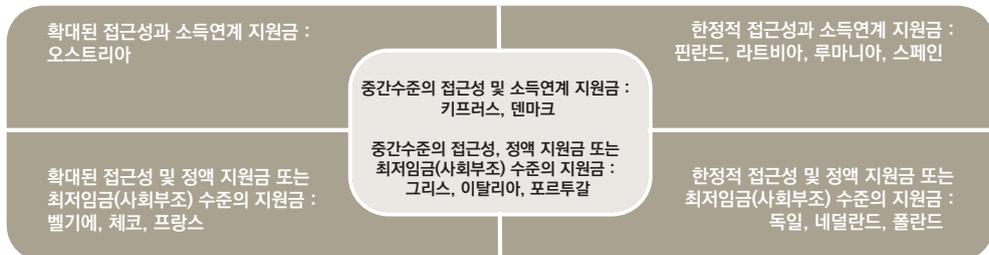
■ 수급자격요건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시행된 여러 제도의 수급요건을 보면 특정 자영업자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 관련된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 업종 제한
- 특정 자영업자 집단 및 특정 형태의 회사로 제한
- 소득감소율 하한선 설정
- 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팬데믹 이전의 매출액 및 소득 규모)
-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제외
- 팬데믹 이전 사업체의 재무건전성

소득보장제도가 (기타 기업 지원대책과 더불어) 심각한 소득 감소, 관련 실직, 기업 도산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소득보장지원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는 수급요건과 지원금 수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그림 3]은 이 글에서 살펴본 EU 회원국별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수급요건과 지원금 수준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단, 많은 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분류는 상대적인 것으로 일부 일반화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3]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분류(2020년 9월 기준)



자료: 유로파운드 국가별 통신원 자료 및 Eurofound(2020c)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대상 업종 및 집단

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득보장제도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봉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한 예술, 연예, 휴양, 운송업을 주요 대상으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소기업 연대기금은 초기에는 일정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는 음식숙박업, 관광 및 행사대행업과 같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벨기에의 자영업자 소득대체제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도는 대부분 1인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네덜란드와 폴란드만 예외적으로 1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슬로베니아의 제도는 초기에는 1인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운영되다가 이후에 대상이 확대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유예와 대출 등의 다른 지원제도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회원국은 특정 법인에 한정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서, 일부 집단은 동일한 곤경에 처해 있음에도 소득보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반적으로 EU 회원국에서는 소득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사업소득이 유일한 소득인 자영업자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외 소득에 상한선을 두거나 연금소득과 같이 자영업 소득과 합산할 수 있는 소득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자영업 재난기금, 벨기에, 체코, 프랑스,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기업고정비용지원금(Fixkostenzuschuss) 제도와 이탈리아 및 폴란드의 제도는 사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외 소득 합산을 허용한다.

체코,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에서는 자영업자 소득보장제도와 다른 정부 지원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회원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소득보장지원금 산정 시 다른 지원제도를 통해 수급하는 지원금 액수를 고려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소득보장지원금 수급자격요건에 초기에는 재산보유액을, 나중에는,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였다. 독일에서는

사회부조인 최저소득급여를 신청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오스트리아(자영업 재난기금),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2020년 7월 1일부터)은 소득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정하여, 팬데믹 이전에 소득이 영세하거나 또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전년 과세대상 순소득이 3만 3,800유로(약 4,55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벨기에에서는 부업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원금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연간 약 1만 4천 유로(약 1,885만 원)의 소득 상한을 적용했다. 덴마크에서는 지원금 수급대상을 연간 소득 1,300~10만 7천 유로(약 175만~1억 4,405만 원)로 제한했다. 핀란드에서는 한시적 실업급여를 월소득 1,090유로(약 147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수급자격을 연간 매출액이 100만 유로(약 13억 4,6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0유로(약 2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수급자격요건으로 인해 지원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의 비율에 관한 명확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는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박스 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부 및 노사의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임금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플랫폼 노동은 유럽에서는 약 15년 전에 새로운 고용형태이자 사업모델로 등장하였다(Eurofound, 2015, 2018). EU의 플랫폼 노동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없지만, 국가별 연구에 의하면 노동인구의 1~2%는 이를 본업으로 하고 있으며 약 10%는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Eurofound, 2020d). 플랫폼 노동의 현재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향후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노동시장 위기 상황에서) 예상되며, 일부 플랫폼 노동 고용형태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있어(Eurofound,

2019)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중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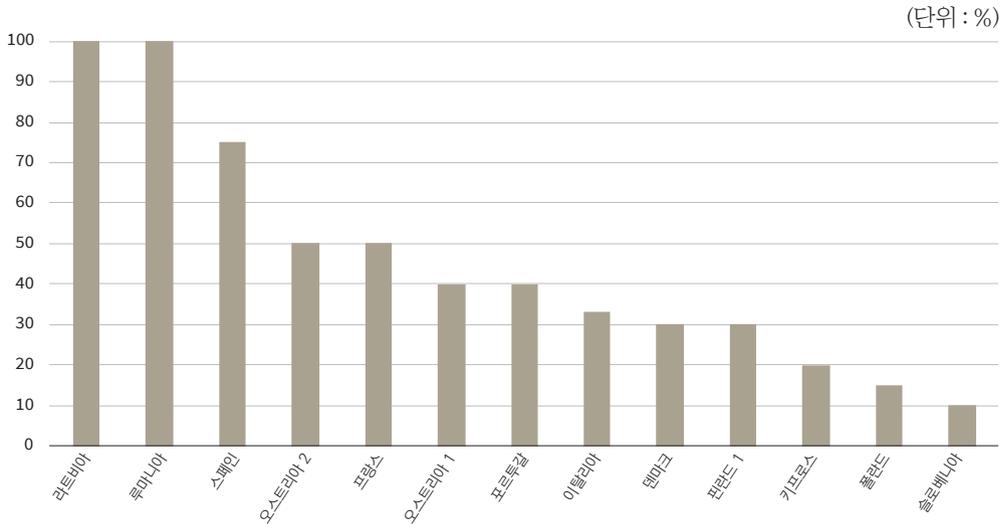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럽을 강타했던 2020년 초,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Eurofound, 2020e). 특히 정부의 봉쇄조치와 고객의 선호 변화 및 플랫폼 정책에 따라 차량공유서비스 및 가사업무 부문의 플랫폼 노동자와 특정 온라인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이 전혀 없어서 소득을 상실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식배달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서비스는 의약품과 같은 다른 상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 노동강도 증가,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 노동으로 인해 건강 위험이 높아졌다.

요약하면, 코로나19 위기로 일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었다. 관련 위험에는 업무와 소득의 불확실성, 보건안전 조치의무 및 그 책임주체 불명, 사회보장제도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가 불명확하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플랫폼 노동자는 정부의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제도나 기업차원의 복지제도와 같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지원제도 중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것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수급자격요건에 소득감소요건이 있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이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EU 전체에서, 팬데믹 시기 플랫폼 노동자의 필요에 부응한 일부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Eurofound, 2020f). 주로 노동자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나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소득보장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에게 보건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파업, 소송 등의) 단체행동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4]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 수급을 위한 소득감소요건 (2020년 9월)



주: 벨기에, 체코, 그리스, 네덜란드에는 소득감소요건이 없음. 오스트리아(1)은 기업고정비용지원금, 오스트리아(2)는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임. 핀란드(1)은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의 소득감소요건임.
 자료: 유로파운드 국가별 통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소득감소요건

많은 회원국에서,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 수급대상을 소득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라트비아와 루마니아에서는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벨기에의 경우도 제도 도입 취지는 동일한데, 봉쇄조치로 부분적 휴업 또는 심각한 영업 제한이 발생한 자영업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은 소득감소율이 75%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준이 매우 높은 반면에,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각각 소득감소율이 15%와 10%인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보장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의 제도는 1인 자영업자만을 수혜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조금만 감소해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슬로베니아에서도 초기에는 1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자영업자들이 지원금 수급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사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기업고정비용지원금 제도는 지원금을 수급하는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해고금지 규정을 직접 연계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통해 고용한 임금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해고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KLI**

참고문헌

- Becker, M.(2020), “Staatliche Förderung in Zeiten des Corona-virus”, Institut für Unternehmensrechnung, Controlling und Finanzmanagement Working Paper, No. 3/2020, Hamburg : Northern Business School.
- Block, J., C. Fisch, and M. Hirschmann(2021), “The Determinants of Bootstrap Financing in Crises : Evidence from Entrepreneurial Ventures in the COVID-19 Pandemic”, *Small Business Economics*, <https://doi.org/10.1007/s11187-020-00445-6>
- Eurofound(2015), *New Forms of Employment*,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17a), *In-work Poverty in the EU*,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17b), *Exploring Self-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18),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Selected Types of Platform Work*,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19), *Policy Brief Platform Work : Maximising the Potential*,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20a), *COVID-19 : Policy Responses across Europe*,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20b), *Living, Working and COVID-19 : First Findings – April 2020*,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20c), *Minimum Wages in 2020 : Annual Review*, Minimum Wages in the EU series,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20d), *New Forms of Employment : 2020 Update Report*,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2020e), “Platform Economy : Developments in the COVID-19 Crisis”,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1.27).
- _____(2020f), “Platform Economy Initiatives”,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1.27).
- European Commission(2019), *Council Recommendation of 8 November 2019 on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387, 15 November.

- Fana, M., S. Tolan, S. Torrejón, C. Urzi Brancati, and E. Fernández-Macías(2020), *The COVID Confinement Measures and EU Labour Markets*, JRC Technical Report, JRC120578,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Horemans, J. and I. Marx(2017), “Poverty and Material Deprivation among the Self-employed in Europe :an Exploration of a Relatively Uncharted Landscape”, IZA Discussion Paper No. 11007, Bonn :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 Kritikos, A., Graeber, D. and Seebauer, J.(2020), “Corona-pandemie wird zur Krise für Selbständige”, DIW aktuell, No. 47, Berlin :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 OECD(2020), “Job Retention Schem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Beyond”, <https://www.oecd-ilibrary.org> (검색일 : 2021.1.27).
- Spasova, S., D. Bouget, D. Ghailani, and B.Vanhercke(2017),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People Working on Non-standard Contracts and as Self-employed in Europe :A Study of National Policies*,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